



〈南北交流・協力分科委員會〉

第5次會議會議錄

1992. 7

統 一 院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7

1. 一 般 事 項

가. 日 時 : 1992. 6. 26(金), 10 : 00~12 : 43

나. 場 所 : 板門店 우리측지역 『평화의 집』

다. 參席者

| 구분 | 우 리 측 | 북 측 |
|-----|--|--|
| 위원장 | 林東源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김정우 (남북고위급회담 대표) |
| 위 원 | 金仁浩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 宋榮大 (통일원 자문위원) 朴雲緒 (청와대 경제비서관) 柳得煥 (상공부 제1차관보) 辛鉉雄 (문화부 문화정책국장) 朴秀蒼 (총리실 정책심의관) | 김채성 (정무원 사무국 부장) 손종철 (무역경제연구소 부소장) 김이순 (문화예술부 국장) 류창석 (국가계획위원회 부국장) 정덕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 김승국 (로동청년사 부주필) |
| 수행원 | 崔興植, 徐承一, 趙明均, 孫鍾洙, 李在浩, 金炳培 | 오평근, 한영호, 김계익, 김창우, 김춘단, 신원철 |

會 議 錄

2. 會 議 錄

<雙方 委員 入場 및 人事 交換>

남(임동원) :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북(김정우) : 건강했습니까?

남(임동원) : 예, 한달만에 다시 만납니다. 거의 한달됐죠?

북(김정우) : 예, 어디 그 사이에 바빠 지냈습니까?

남(임동원) : 예, 좀 바쁘게 지냈어요.

북(김정우) : 김인호선생이랑 또 상공부차관보선생이랑 저번 회담엔 참가 못하고 외국출장에 갔었는데, 그래 일이 잘 됐습니까?

남(김인호) : 예.

남(임동원) : 오늘 아주 전원이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북(김정우) : 앞으로야 뭐 계속 전원이 참가하겠지요. 저번에 약속도 있었으니까... 그쪽 농사형편이 어떻습니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 영·호남지방에서 가뭄이 한달째 계속되어 가지고 예전에 비해 비가 20% 정도밖에 안와서 많은 논에 벼를 못냈다는데, 어떻게 제대로 되었는지...

남(임동원) : 남부지방에 가뭄이 계속되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데가 군데 군데 있어요. 그러나 대개 수리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펜밭인데, 특정지역은 아주 곤란한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곧 장

마비가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북(김정우) : 남쪽에는 천수답이 좀 많은 모양이죠?

남(임동원) : 군데군데 산간지역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북(김정우) : 경남지방에 한 15% 면적, 2만 3천 정보가 벼모내기를 못했
다, 이렇게 그쪽 신문들이 내고 있던데, 그만하면 많은 양입니다.

남(박운서) : 모내기는 99% 정도 했는데 경남지역에는 한달반 정도 계속
비가 안오니까 저수율이 55% 정도 떨어졌어요.

남(임동원) : 북쪽은 어때요?

북(김정우) : 농사를 잘 하려면 관개를 좀 해야 됩니다.

남(임동원) : 관개시설이 잘되어 있어야지.

북(김정우) : 우리는 지금 관개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특히 한 2년 전에
2천리 물길공사를 했어요.

남(임동원) : 2천리?

북(김정우) : 예, 2천리. 그게 금년도에 아주 운을 냈습니다. 가무니까 물
길공사덕에 농사가 차질없이 되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논밭면적
에 관개면적 비율이 높은 나라로 인정되어서 많은 나라들에서 관개경
험을 배우려고 많이 오고 있어요. 또 우리 주석님께서 농사를 천하지대
본이라고 농사를 잘하려면 물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교시하셔서 물
확보에 많은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천수답이 거의 없다시피 됐습니다. 아주 높은 다
락밭들, 높은 지대나 안되고 논은 거의 다 관개시설이 됐습니다. 서해

관문도 우리가 막은 겁니다.

남(임동원) : 올해에도 하여튼 풍년이 지도록 남이나 북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대해 봅시다

최근에 조그마한 일이지만 경사스러운 일은 기계화를 위한 한글의 로마자 표기...

북(김정우) : 거 합의했지요.

남(임동원) : 남북간에 합의했는데, 한 5년 걸려서 합의했다는 것 같아요. 조그마한 것이지만 하나씩 합의를 이룩해 나간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북(김정우) : 5년중에는 합의서 채택 전이 많고 합의서 채택 이후에는 석 달만에 합의했으니까, 합의서가 지금 운을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임동원) : 그렇지요. 앞으로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하면 좋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북(김정우) : 다른 분야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는데...

남(임동원) : 물론이죠. 모든 분야가 그렇게 되어야죠. 노력을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장내정리하고 회의를 시작할까요?

북(김정우) : 합시다.

남(임동원) : 예, 장내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은 남측지역에서 회의를 하니깐 관례에 따라서 제가 사회를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김정우) : 그렇게 하지요.

남(임동원) : 공개, 비공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까요?

북(김정우) : 공개로 합시다.

남(임동원) : 뭐 공개로 꼭 해야 될 또 좋은 선전자료가 있습니까?

남·북(일동) : (웃음)...

북(김정우) : 선전자료가 아니라 그쪽에서 자꾸 무슨 오보란 말이 많이 나와서, 오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공개를 하면 좋겠다...

남(임동원) : 내가 오늘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 드릴테니까, 관례대로 비공개로 하고 회의를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북(김정우) : 우리 저번에 비공개로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공개로 하고 또 다음번엔 비공개로 하든가, 한번씩 이렇게 격차로 해 봅시다.

남(임동원) : 그래요?

북(김정우) : 합의서도 비공개 또는 공개로 되어 있는데, 공개로 합시다.

남(임동원) : 공개로 해도 좋고 비공개로 해도 좋아요. 그런데 관례상 흔히 보면 일이 되고자 할 때는 비공개로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일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하자는데, 그리고 또 선전을 많이 할 때는 공개로 하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는데...

북(김정우) : 선전인가 무슨 뭐 일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저 한번씩 격차로 공개, 비공개로 하자. 그래서 먼저번에 비공개로 했으니까 ... 또 내가 왜 공개로 해야겠다고 생각하느냐면, 전번에 뭐 적십자회담인가 보니까 오보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자들이 다 있는 데서... 그 다음에 또 비공개로 하니깐 무엇이 하나 불리한 게 있는가 하면,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해야 하는데, 시간이 바쁘는데 기자들이 또 따로 만나서 대달라 뭐 이러는데, 그저 이것 저것 다 생각하면 그 공정도 하나

삭감하고, 또 협력·교류분과사업이란 게 큰 비밀도 아닌데 뭐 군사나
핵통제하고도 다른 거고... 그래서 한번 공개로 해 봅시다.

남(임동원) : 그래요?

북(김정우) : 어떻게 할까요?

남(임동원) : 뭐 좋아요. 아무렇게나 해도 좋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은 회의 끝내 봐야 알겠지만, 무슨 생각이 있구만.

남·북(일동) : (웃음)...

남(임동원) : 좋아요. 우리 어차피 다 공개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북(김정우) : 임선생 뭐 찢리우는 데가 있는 모양이구만.

남·북(일동) : (웃음)...

남(임동원) :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 찢릴 게 뭐 있어요?

북(김정우) : 그럼 공개로 해 봅시다.

남(임동원) : 좋습니다. 공개로 합시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우리측이 먼저
첫발언을 하고, 또 김위원장이 이어서 발언해 주시고, 토의하고,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발언을 하겠습니다. 발언문 넘겨
주세요.

오늘 공개로 할 줄 알았으면 기자들 좀 많이 데리고 올 것인데 잘못
했군.

북(김정우) : 왜, 조금 왔습니까?

남(임동원) : 예...

북(김정우) : 회담 시작 전부터 그러는 것을 보니까...

남(임동원) : 아니, 많이 온다는 것은 한 20~30명 데리고 올 것인데 잘

못했다는 이야기지. 제가 첫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南側첫發言>

김정우 위원장,

그리고 북측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갖게 됩니다.

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오는 9월 5일까지 남북교류·협력분야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이와 같은 부속합의서 작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30일, 제4차 회의에서 부속합의서의 내용과 관련된 몇가지 차이점에 대한 우리측 견해를 밝히면서 부속합의서안을 일부 조정한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귀측도 제4차 회의에서 부속합의서 내용중 미결로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쌍방은 『남북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번 회의에서 쌍방은 부속합의서 구성체계에 관해 어느 정도 견해차이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나는 쌍방이 부속합의서 토의를 합의된 기일안에 끝내기 위하여 서로 수정안을 내놓고 절충을 모색함으로써 다소의 진전이 있었던 것을 다행

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쌍방이 몇가지 문제에 관해 아직도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제5차 회의를 맞게 된 데 대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 차이점도 극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후 우리 7천만 온 겨레는 남북 사이에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적 신뢰와 번영의 시대가 개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대와 염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한 시한도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며 이것은 결코 여유있는 기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행기구인 공동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 공동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 실천대책을 담은 부속합의서의 생산이야말로 우리에게 부과된 시급하고 중요한 공동의 책무라고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상호 이해와 호양의 정신을 갖고 좀 더 분발함으로써 나머지 미결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나는 부속합의서 토의에서 미결로 남아 있는 문제가 구성체계문제와 내용조정문제라고 생각하며 이에 관한 우리측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우리가 협의·해결해야 할 일은 부속합의서의 구성체계 문제입니다.

우리측은 지난 4차회의에서 통행·통신분야가 갖고 있는 독자성을 고려하여 그 이행은 경제와 사회문화 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하도록 하되 부속합의서에는 통행·통신을 별도의 『장』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속합의서 작성시한이 가까워 오는 상황에서 부속합의서 구성체계에 관한 합의를 조속히 이루어 부속합의서 토의를 성과적으로 진행시키려는 입장에서 통행·통신문제를 해당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 포함시키자는 귀측 주장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교통·통신 관련사항은 경제분야로 분류하고 인적 왕래·접촉 사항은 사회문화분야에 포함시키면 될 것입니다.

또한 경제분야에 포함되었던 보건 관련사항은 사회문화분야로 재분류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부속합의서의 내용조정문제입니다.

첫째,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당국승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측이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에 대하여 당국승인을 명백히 하고자 하는 이유는 교류·협력 당사자의 자격에 대한 정부차원의 심사와 이의 상호 확인이 남북교류·협력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선 물자교류의 경우 우리측은 무역업 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귀측과도 자유롭게 물자교류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교류당사자에

대한 당국의 지정 제도는 남북교류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귀측의 경우 물자교류를 할 수 있는 자는 정부기관을 포함한 국영무역기관이며 무역부가 각 무역기관별로 취급할 수 있는 전문품목을 지정하고, 무역기관들은 지정된 품목 범위에서만 무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남북교류에도 적용될 것이므로 우리측의 이러한 제도는 귀측과의 관계에서 당연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청산계정에 의한 남북물자교류의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품목, 교역량을 결정하기로 잠정 합의되었기 때문에 남북교류 당사자가 추진하려는 물자교류가 공동위원회 결정사항에 맞는지, 청산계정 대상인지를 정부당국이 심사, 승인하는 과정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협력사업은 물자교류에 비해 자본, 기술 및 인력이 이동하고 사업기간과 파급효과가 보다 장기적이고, 추진과정에서 서로의 신뢰가 쌓여가지 않으면 남북경제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격상 보다 더 책임성과 신뢰성이 요청됩니다.

우리측 경제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자격없는 사업자가 남북협력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가 남북협력사업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갖춘 사람을 남북협력사업자로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는 양측 당사자가 예비접촉이나 상담과정을 거쳐 잠정 합의한 경우, 그것을 정부당국이 산업정책이나 외환관리의 측면에서 타당한가 여부를 심사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과의 합영사업에 대해서는 귀측도 합영법에 의거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은 다음 대외경제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정부당국의 승인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해외투자에 대한 당국의 승인은 세계적으로도 일반적인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귀측의 경우 귀측의 교류·협력 당사자에 대한 당국의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경제공동위원회를 통하여 이러한 당국승인을 상호 확인하는 과정을 명백히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많은 교류·협력의 초기단계에서 상호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은 교류·협력 당사자가 상대방 교류·협력 당사자와 신뢰감을 갖고 활발히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교류·협력 당사자의 당국승인은 우리측만이 운영하려는 제도가 아니며 남북간에 경제교류·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합의하여 운영해야 할 제도적 장치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귀측이 주장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문제입니다.

우리측은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체제존중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에 부합되지 않으며, 앞으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남북화해공동위원회』에서 상호주의원칙하에 협의·해결하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우리 쌍방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성실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이행·준수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서로 다른 체제를 존중하는 데 있으며 그

것은 곧 체제를 떠받쳐주고 있는 상이한 법질서를 인정·존중하는 데서부터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리측은 그동안 통일문제에 관련된 귀측의 제반 법과 규약내용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상대방 체제 존중』이라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존중하는 뜻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측이 『법적·제도적 장치 철폐』 문제를 어느 일방의 문제로만 단정하고 계속 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해결방법은 남북 쌍방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고 제3자 등 누구에게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공정한 방향에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남북이 서로 상대방의 법질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선행하여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서로 협의하여 개선해 나감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작업은 앞으로 구성·운영될 『남북화해공동위원회』가 담당하여 처리하는 것이 그 구성취지와 성격으로 미루어 적합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쌍방이 법에 관한 문건목록을 서로 교환키로 합의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상호주의원칙 아래 조정·해결하기 위한 첫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북정치분과위원회의 이와 같은 노력을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교류·협력분과위원회와 정치분과위원회 그리고 군사분과위원회가 모두 남북고위급회담의 테두리 안에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가 부여받은 임무와 기능이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이제 법적 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서 더이상 거론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셋째, 쌍방 입장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남북이산가족문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쌍방안에서의 근본 차이점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주체를 쌍방 당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쌍방적십자단체로 할 것인가 하는 것과 당국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정도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산가족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 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주체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8조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남과 북의 당국입니다.

귀측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18조의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서신거래와 왕래,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재결합을 실현시켜야 하는 『남북당국』을 말하는 것이지 『남북적십자단체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남북당국』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다른 조항과 마찬가지로 동 조항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한 데 따라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여 실천에 옮겨 나가는 것이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남북합의서 규정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남북합의서 규정과는 달리 이산가족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에 넘길 것을 주장하면서 부속합의서에는 이것을 명시하는 『원칙적 대책』만 담으면 된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우리측은 그러한 귀측 주장이 남북합의서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주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인도적 문제가 갖는 절박성을 고려하여 하루속히 그 해결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충정에서 이산가족문제에 관한 해결대책은 쌍방 당국이 마련하고, 그 이행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적십자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남북합의서를 존중하고 귀측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십자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귀측은 우리측의 절충안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쌍방 당국간에는 이산가족문제에 관한 『원칙적 대책』만 합의하면 되며 그것은 적십자단체 주관 원칙에 관한 합의만 이룩하면 되는 것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관해 쌍방 당국 주관을 명시하고 있고 쌍방 당국간에 『구체적 이행대책』의 협의·합의를 규정한 남북합의서에 배치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쌍방 당국이 온 겨레 앞에 엄숙히 약속한 남북합의서를 왜곡하거나 어기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귀측은 인도적 문제는 적십자단체에 넘기는 것이 이산가족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상황을 잘못 파악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측 제안에는 과거 적십자회담 때 쌍방간에 합의되었거나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사항, 특히 귀측 주장까지 대폭 수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귀측 당국이 이산가족문제에 관해 관심을 표명한 내용까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측이 인도적 문제해결에 관한 의지만 있다면 우리측 제안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며, 우리 쌍방 당국간에 합의만 이루어지면 1개월 이내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재개하여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결방식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이번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에 관한 쌍방 당국간 타결과정을 통해 확인하였으므로 이 좋은 경험을 살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이산가족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은 쌍방 당국간에 구체적 대책을 마련한 후 그것을 쌍방 적십자단체에 넘겨 이행토록 하는 데 있으며, 거기에 알맞게 제시된 우리측안에 호응해 오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넷째, 부속합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쌍방 입장에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육로연결과 공로개설을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연계시킬 것인지의 여부 문제입니다.

우리측은 남북사이에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 온 거래의 염원을 존중하고 구현시켜 나가기 위해 해로 뿐만 아니라 육로, 공로도 함께 연결

개설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 데 따라 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습니다.

귀측안을 보면 물자교류를 위한 해로연결은 제한없이 하되, 인적왕래 등을 위한 육로, 항로는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 데 따라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북간의 교통로 전면연결을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군사대결상태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귀측 제안은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다각적 교류·협력』을 명시하고 있는 남북기본합의서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측은 귀측이 인적왕래를 위해 판문점을 통과지점으로 정하고 임시 교통로도 개설할 수 있는 형편이라면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이전이라도 판문점 통과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문산·개성간 도로와 경의선 철도의 연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남북사이에 두개의 해로를 연결하는 상황이라면 한개의 항로 정도를 개설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 몇개의 통행로 개설로 교류·협력이 추진되면 오히려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전지에서 나는 통행로 개설문제는 제1단계에서는 문산·개성간 도로와 경의선 철도연결, 인천항과 남포항, 포항항과 원산항사이의 해로연결, 김포와 순안비행장간 항로를 개설, 필요에 따라 운행하는

것으로 하고, 제2단계에서는 교류·협력이 증대되는 데 따라 육로, 해로, 항로를 추가로 연결·개설하는 것으로 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부속합의서 내용중 귀측이 민족구성원들의 왕래·접촉과 관련하여 제시한 제8조 ①항 문제입니다.

귀측은 ①항에서 『북과 남은 사상과 정견, 신앙과 소속, 거주지와 과거 여하에 관계없이 정치인, 경제인, 학자, 언론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각층 인원들이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그 내용면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북기본합의서 제17조의 정신을 살려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대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나는 오늘 회의에서 또다시 새로운 우리측의 부속합의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 수정안은 구성체계를 대폭 수정한 것입니다.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이행과 준수에 관한 부속합의서(안)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하

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경 제

- 여기에는 교통·통신 분야를 포함시키고 보건을 제외하였습니다.-

제 1 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물자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투자 등과 과학·기술, 환경분야의 교류·협력 및 교통, 통신의 연결·운영을 지원·보장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공업, 광업, 농업, 어업, 건설, 운수, 전력, 통신,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공동개발과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 이렇게 하고 세항으로 들어갑니다. 지난번 안에는 조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귀측안과 맞추어서 세항으로 고친 것입니다.-

- ① 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 당사자는 자기측 당국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 교류·협력 당사자는 당해 사업에 대해 각기 자기측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당사자간에 직접 체결된 계약에 의해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한다.
- ② 물자교류의 대상품목, 교류규모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품목별 수량은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한다.
- ③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④ 남북사이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⑤ 남과 북은 교류물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남북간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 ⑥ 남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따른 대금결제는 청산결제 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포함하여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에 따른 대금결제 및 자본의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⑦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종사하는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의 자유와 편의를 보장한다.
- ⑧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 통계 및 통계기준과 공업규격 등을 상호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 관련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⑨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남북사이의 경제교류와 협력 추진에 필요한 기구를 관문점에 설치·운영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이것은 귀측안을 고려하여 별도의 조항으로 나눈 것입니다.—

- ① 남과 북은 정보자료의 교환, 대학·연구기관·개인간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 전문가의 상호교류를 실시하고 환경보전대책을 공동으로 강구한다.

-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의 과학·기술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육로, 해로, 항로를 개설하고 통과지점을 지정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① 남과 북은 우선 육로의 경우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간 도로를 연결하고 인천항과 남포항, 포항항과 원산항사이의 해로와 서울 김포공항과 평양 순안비행장사이의 항로를 연결하여 개설한다.
-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이 증대되는 데 따라 육로, 해로, 항로를 추가로 연결하여 개설한다.

- 달라진 부분입니다. -

- ③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④ 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 ⑤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⑥ 남과 북은 교통로 연결·운영에 관한 국제협약을 존중한다.
- ⑦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그 승무원의 출입절차, 교통수단별 운행방법, 통과지점 등 남북간의 교통로 개설·운영에 관련된 실무문제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구성하는 남

북교통실무협의회에서 한다.

제 5 조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① 남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물과 전기통신은 남북연락사무소에 우편물교환실과 전화교환실을 설치하여 교환·연결한다.
- ②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③ 남과 북은 공적사업과 남북간에 합의된 교류·협력에 필요한 우편과 전기통신교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범위를 넓힌다.
- ④ 남과 북은 남북 주민이 우편과 전기통신교류를 위해 상대측 주민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한다.
- ⑤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관한 국제협약을 존중한다.
- ⑥ 남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전달방법 등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관련되는 실무문제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구성하는 남북통신실무협의회에서 한다.

제 6 조 남과 북은 경제의 각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를 통한 경제협력 등의 대외경제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7 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있는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2 장 사회문화

- 여기에는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왕래·접촉과 과학분야를 포함시켰습니다.-

제 8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및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과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접촉을 지원·보장한다.

제 9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사회문화분야에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①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이룩한 학문적 성과와 경험, 연구자료, 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방송프로그램 등 여러 분야의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 ② 남과 북은 국토순례, 수학여행, 친선방문, 취재활동 등을 통한 학생, 교직원, 작가, 예술인, 체육인, 청소년, 언론인, 종교인, 학자, 전문가 및 종사자 등 사회문화분야 관련인원간의 상호 교류를 실시한다.
- ③ 남과 북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과 민족문화유산을 비롯한 사회문화분야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행하는 연구, 학술조사, 편찬사업 및 학술목적의 행사와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를 실시한다.
- ④ 남과 북은 남북공동기념일과 민족명절에 문화·예술단을 상호 교환하며, 체육경기대회 공동개최, 쌍방이 개최하는 각종행사에 상호 초

청·참관, 대표단 파견 등 사회문화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 ⑤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방송, 통신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사회문화분야의 기관과 단체간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⑥ 남과 북은 상대측의 출판, 연극, 음악, 미술, 건축, 사진, 영상저작물 등에 대한 권리를 상호 보호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⑦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남북사이의 자료교환에 필요한 기구를 판문점에 설치·운영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시한다.

- ①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여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 ② 남과 북을 왕래하는 자는 쌍방 당국이 허가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왕래에 필요한 물품과 현금을 휴대할 수 있다.
- ③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교통수단 등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④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자의 방문목적 수행을 위한 자유로운 활동과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하며,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자는 상대측의 질서와 안내에 따른다.

- ⑤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출판·보도 등 사회 문화분야의 국제기구와 국제행사에서 서로 협력하며, 국제경기대회 단 일팀 참가 등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 12 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있는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3 장 인 도

—이것은 지난번 안과 같습니다만 조항을 세항으로 바꾸었습니다.—

제 13 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이하 『이산가족』이라 한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협의·실천한다.

- ① 이산가족들의 범위는 가족의 경우는 흩어질 당시의 가족과 그후 출생한 자손으로 하고, 친척의 경우는 방계에서 8촌, 처가와 외가로는 4촌으로 한다.
- ②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서신거래를 남북연락사무소에 우편물교환실을 설치하여 우선적으로 실현하도록 하며, 전기통신수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남과 북은 판문점에 면회소를 설치하여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실현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다른 지역에도 이산가족면회소를 설치하여 상봉하게 할 수 있다.

- ④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왕래자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며 편의를 제공한다.
- ⑤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방문 이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을 교환할 수 있다.
- ⑥ 남과 북은 이산가족들이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그들이 원하는 곳에서 재결합하여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 ⑦ 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이산가족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14 조 이산가족들의 주소와 생사확인 및 이 합의서 제3장 『인도』부문의 이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주관하에 한다.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남북적십자회담이 재개되도록 적극 협조한다.

제 15 조 남북적십자회담의 쌍방 책임자들은 적십자회담에서의 협의결과를 남북고위급회담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수정·발효

-이는 전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제 1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17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월 일

-이하 서명권자 있습니다.-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 석 대 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이상이 우리측의 새로운 부속합의서 수정안입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우리 쌍방 당국이 지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에 합의한 것은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고대해 온 1천만 이산가족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7천만 온 겨레에게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겨레의 기대를 안고 시작된 쌍방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이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방문단 교환에 관한 실무문제를 논의했으나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최근에는 차기 접촉 날짜마저 잡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귀측 적십자 실무대표는 지난 3차 접촉에서 우리측 당국이 핵문제 해결없이 남북관계 진전이나 합의서 이행을 유보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면서 이에 관한 남측 당국의 명백한 입장표시가 없는 한 실무문제 토의를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대화부정적 태도를 표시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귀측의 태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기회에

남북간 현안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명백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사항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행·준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책임있는 쌍방 당국이 7천만 겨레와 역사 앞에 엄숙히 선언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북기본합의서』가 이행·준수되어야 함은 물론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도 반드시 이행·준수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단계에서 우리 쌍방 당국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은 부속합의서 작성과 함께 남북상호사찰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우리가 합의한 대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부속합의서를 조속히 작성하여 공동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시켜야 합니다.

이와 아울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사찰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철저하고 완전한 남북상호사찰을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핵문제의 해결이 없는 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핵문제의 진전이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측은 핵문제가 민족생존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서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의 해결없이 과연 원만한 남북관계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측은 핵무기를 시험·제조·사용하지 않으며 핵에너지는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핵재처리시설·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며 상호사찰을 실시하기로 한 『비핵화 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그와 같은 내외의 우려를 말끔히 씻도록 함은 물론,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같은 인도적 사업은 핵문제나 다른 어떠한 문제와도 연계시켜서는 안되며 무조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은 우리 쌍방 당국이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 첫 가시적 성과로 겨레 앞에 엄숙히 약속한 사업인 동시에 순수한 인도적 사업으로 핵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나 조건으로도 이의 실현을 어렵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귀측은 지난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사업에 합의할 때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에 전제조건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이제 와서 그 무슨 『제2의 핵소동』이라는 것을 구실로 쌍방간에 합의된 노부모방문단 교환사업을 위태롭게 하려는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쌍방간에 신의있는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방문단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겨레를 실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산가족방문단 문제는 우리 쌍방 당국간에 제기되어 합의된 사항이므로 그 이행에 관해서도 쌍방 당국은 응당 책임을 느끼고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지에서 나는 귀측 적십자단체로 하여금 아무런 조건없이 적십자 실무대표접촉에 나와 실무절차토의를 매듭지음으로써 방문단 교환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귀측은 지난 6월 22일, 일본의 『을사조약』 및 『정미7조약』의 위조와 관련하여 남북 당국이 공동대처할 것을 우리측에 제의해 왔습니다.

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 어느 누구도 일제가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체결한 『을사조약』을 비롯한 제반 조약의 합법성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을사조약』, 『정미7조약』 등 구한말에 맺은 모든 조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이와 같은 입장을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일본측에 명백히 밝혔던 것입니다.

한·일 기본조약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이번에 남북 쌍방 학계에서 『을사조약』 등에 대해 발견한 자료들은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을 정당성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측은 한·일 합방조약 등의 무효를 확인한 한·일 기본조약 체결 이후에도 일본에 대해 과거사 청산에 일부 미진한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위한 양자간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측의 입장과 한·일관계 상황에 비추어 『을사조약』 등의 위조관련 문제는 우리측이 일본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다시 제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의 『긴급의제』로 토의하여 『공동결의문』같은 것을 채택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남북 쌍방이 과거 우리 민족의 어두웠던 많은 일들을 학술차원에

서 함께 조사·연구하고 사료를 발굴하는 것은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지키고 민족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리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측은 『을사조약』, 『정미7조약』의 날조사실 규명과 더불어 일제에 항거한 의병 및 독립운동에 관한 새로운 사료를 발굴, 교환하고 이를 공동조사·연구하기 위해 남북 역사학자간의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우리 쌍방 당국은 앞으로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남북 학술교류차원에서 그러한 일을 주선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작성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부속합의서 작성 시한을 좀 더 앞당겨 7월중에 끝냄으로써 공동위원회가 조속히 가동되도록 노력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북측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측의 새로운 수정안 제시로 인해 그동안 논의 대상의 하나였던 부속합의서의 구성체계 문제에 관해서는 쌍방간에 일단 견해차이를 좁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측 부속합의서안이 총 4장 17조 43개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귀측의 지난번 안은 총 4장 14조 4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쌍방안이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과제는 부속합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앞서 지적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 역시 우리측이 오늘 제시한 수준에서 절충함으로써 부속합의서 내용토의를 하루속히 매듭짓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북(김정우) : 수고했습니다. 제가 발언하기 전에 우선 임선생의 발언에 대한 제 견해를 몇가지 표명하겠습니다.

먼저 부속합의서 토의와 관련해서 장 형성체계를 우리안을 받아들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내용에 있어서 당국승인제를 포함해서 합의 못본 문제들을 고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쪽에서는 『핵문제의 해결이 없는 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핵문제의 진전이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했는데, 이것은 지난 6월 1일 정원식국무총리의 전화통지문, 6월 2일 이동북대변인의 대북성명, 6월 20일 당정회의의 결정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적십자회담에서 그쪽 실무대표들이 오보라고 한 것은 오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맞다는 것을 당국을 대표해서 임위원장이 선언한 것이나 같습니다. 발언문은 그대로 여기에 우리는 넘겨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핵문제의 해결이 기본합의서 리행과 어떻게 관계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자기 입장을 명백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북남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교류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할 때 핵문제와 연관시켜서 그 어떤 조항도 기입한 적이 없습니다. 국제관계를 보나, 국제법규적으로 보나 합의서, 계약서, 협정, 조약들은 그 문건에 지적된 대로 오직 리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국제핵사찰을 받기 전에는 국제핵사찰을 받아야 합의서를 리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걸었고, 이제는 국제핵사찰을 무난히 정상적으로 받아서 온 세계가 북에는 핵개발이 평화적 리용에만 목

적이 있다, 핵무기 개발상태에 있지 않다 라는 것이 명백해지자, 또다시 제2의 핵소동을 조작해 가지고 기본합의서를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진전되기 어렵다는 것을 공공연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민족 앞에 그쪽에서는 책임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위원장은 오늘 자기의 발언에서 무엇이라 했는가? 『첫째, 남북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사항은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행·준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책임있는 쌍방당국이 7천만 겨레와 역사 앞에 엄숙히 선언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기본합의서를 우리가 채택·발효시킬 때 핵문제가 해결 안되면 리행 안해도 좋다는 조항을 넣었습니까?

다른 하나는 비핵화공동선언은 누구의 발기에 의해서 비핵화공동선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발기를 하고 그쪽에서 호응을 해서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비핵화공동선언에 준해서 북남상호사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원인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백히 해야 됩니다. 그쪽에서는 비핵화공동선언의 해당한 문건을 채택하기로 우리하고 합의했고, 또 사찰규정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부속합의서를 아직도 제출안한 것도 그쪽이고 비핵화공동선언과 또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하는 합의서 조항대로 사찰규정을 제기 안한 것도 그쪽입니다.

아마 임위원장이 그 사이 핵통제공동위원회 사업에서 떨어져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상기시키겠습니다.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조 4항을 들여다 보시오. 사찰대상은 엄연

히 핵시설과 핵물질, 혐의가 있는 핵무기와 핵기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2조 1항을 보시오. 거기에는 부속문건과 사찰규정을 2개월 정도 기간 내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월 19일 핵통제 공동위원회 1차 회의 한 때로부터 이제는 석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속합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하고서 비핵화공동선언이 리행 안된 책임이 우리쪽에 있는가?

그리고 사찰대상에서 핵시설과 핵물질, 혐의가 있는 핵무기와 핵기지라고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그쪽에서는 핵무기와 핵기지를 사찰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핵무기와 핵기지를 사찰대상에 넣고 처음부터 제기했는가? 어느 핵통제공동위원이 몇차 때 나와 제기했는가? 핵통제 공동위원회 사업을 통일원차관으로서 고위급대표로서 한번 돌이켜 보시오.

다음 사찰방법에서는 우리가 규정을 명백히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제기했는가? 『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을 놓고 볼 때 4조에다가 뭐라고 했는가? 비핵화 공동선언의 4조에다가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한하여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사찰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사찰방법을 어떻게 제기했습니까?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이 아니라 군사기지까지 포함해서... 여기에는 명백히 핵물질, 핵시설, 핵기지, 핵무기라고 되어 있는데, 엉뚱하게 대상에서 군사기지를 제기하는가 하면 사찰방법에서는 특별사찰을 제기합니다. 이렇

계 핵통제공동위원회 사업에 장애를 조성한 장본인이 오늘 나와서 지금까지는 오보라고 하던 문제를 기본발언에서 핵문제 진전 없이는 그 어떤 북남관계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과연 이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아주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논거를 보시오. 그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합의서가 리행되어야 하며 또한 리산가족문제에 대해서는 전제조건 없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기하면서 다른 문제는 핵문제와 결부시켜 가지고 리행 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핵문제가 어떻게 해서 인도적 문제는 결부 안되고 기본합의서의 다른 사항에는 결부되는가? 논거가 맞는가?

아마 임위원장은 7차 고위급회담 합의문을 똑똑히 기억 못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합의문 읽어 드리죠. 우리 7차 북남고위급회담 합의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담에서 쌍방은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하고, 일곱가지 중에 다섯번째에다가 우린 어떻게 기록했는가? 『북남합의서 리행에 대한 첫 선물을 민족 앞에 내놓으려는 염원에서 올해 8.15 해방 47돌을 계기로 각계로 로부모 100명과 예술인 70명, 그리고 70명의 기자, 보장성원들로 구성되는 리산가족 로부모방문단 및 예술단을 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교환하도록 쌍방 적십자단체들에 위임한다.』이렇게 했습니다.

이 일곱가지 중에서 아직도 리행 안된 것이 세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화해공동위원회 구성문제, 다음으로는 부속합의서를 8차 회담 전

까지 내올 데에 대한 문제, 세번째가 로부모방문단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6월 20일 이동북대변인이 타워호텔 세미나에 출연해서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가? 8차 회담 전에 부속합의서 내오기는 어렵다. 핵문제 진전이 없이는 어렵다. 그러면 부속합의서는 핵문제에 결부시켜서 안하겠다 그리고, 로부모방문단은 하자고 그리고 ... 7차 고위급회담 합의문 서두에다가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고 했는데, 성실히 리행하기 위해서 재확인한다고 해놓고는 다른 문제는 왜 성실히 리행하지 않는가? 부속합의서는 왜 리행 안하는가?

그리고 력사적으로 따져볼 때 그쪽에서 2월 19일 6차 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다음에 2월 25일 정원식국무총리가 이북5도민 초청간담회에서 한 말, 3월 3일 통일관계장관회의에서 주장한 내용, 3월 12일 최호중통일원장관이 이야기한 것, 4월 25일 법무부에서 일종의 성명이나 신사협정과 같다고 기본합의서를 비난한 것, 이 모든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 후과에 대해 그쪽에서는 생각해 봤습니까?

그러다가 7차 고위급회담에서 공동위원회라도 나와야겠다는 우리의 강경한 주장 앞에 마지 못해 공동위원회를 형성해 놓고는 8차 때까지 부속합의서를 만들겠다고, 성실히 리행하겠다고 수표해 놓고는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7차가 끝나니까 또 다시 시작됐습니다. 6월 1일 전화통지문, 6월 2일 대북성명, 6월 20일 당정회의, 6월 22일 대변인 이야기... 그쪽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게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하겠

다고, 또 성실히 리행하자고 앞에서는 말해 놓고, 리산가족 문제는 별도로 그와 관계없이 하자... 룬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 문제입니다. 그쪽에서는 말을 잘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민족의 중대사를 해결하자고 해서, 통일을 하자고 해서, 북남당국이 모여 앉은 회의인데, 제기하는 문건조차 똑똑히 검토를 안하고 신빙성 없이 제기합니다.

그쪽에서 읽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봅시다. 그쪽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는가?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은 한일간에 벌써 65년 6월 22일 기본조약 체결 때 해결됐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공동대처하자는 것, 대처할 필요가 없다, 학술적 차원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사료나 확인하고 토론이나 해보자... 그래 이것이 7천만 겨레 앞에 책임적인 발언이며, 우리한테 제기하는 문건이 책임적인 문건인가?

그쪽에서는 지금 한일기본조약 제2조를 읽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제2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읽은 대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지금 무효가 되었다, 지금 그쪽 말은 그것인데, 그래 65년 6월 22일날 그쪽에서, 우리가 그토록 민족을 대표해서 한일 협정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통일된 다음에 일본을 대상해서 협정을 하자 하고 권고했음도 불구하고 굳이굳이 협정을 하더니 이 협정조문이 지금 어떤 후과를 미쳤는가? 이 문건을 제출한 오

늘 아침까지도 그쪽에서는 이 후과를 모릅니다.

여기에 지금 이 회답을 청취하고 있는 남북의 모든 기자선생들 신중히 들어두고 력사기록에 남겨두기 바랍니다. 제2조에, 그쪽에서,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했기 때문에 결국은 1905년에 체결된 을사5조약과 1907년에 체결된 정미7조약이 체결된 문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문건에다 확인해 주었습니다. 을사5적을 능가하는 죄를 범했다. 어떻게 돼서 강제로 체결하다가 체결하지 못한 문건을 체결한 문건으로 인정하고 무효라고 하는가? 우리는 력사를 이렇게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임선생은 그쪽에서 규장각총서 현대 법령편을 편성한 규장각 관장 서태진교수나 신용하교수 글을 읽었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과연 을사5조약이 체결된 조약인가? 강제라도 체결된 조약인가? 체결 안됐습니다. 왜 안됐는가? 그것을 모릅니까?

황제 고종은 11월 17일날 을사5조약이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공사간에 체결된 것으로 무효라는 것을 1907년 1월 16일 영국 트리분지 기자 스클라우스 클라우드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친필성명을 다섯가지로 발표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1월 16일 영국 트리분지와 똑같은 친필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효종실록 제46권, 여기에는 명백히 이 조약이 체결 안된 조약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한일협정을 65년도 내주면서 과거 력사문건도 들춰보지 않고 체결된 조약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놓고, 무효다... 이제

와서는 체결되지 않은 조약이라는 것이 확정됐는데, 왜 아직도 이 조약을 가지고 체결된 조약은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공동대처는 필요없다고 론거를 세우는가? 그럼 뭘 두둔하자는 것인가?

황제 고종은 왕위를 내놓으면서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절대로 나는 그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외교권을 넘겨준 일도 없으며, 황실권을 외국인한테 준 일도 없으며, 통감부 설치를 승인한 일도 없다고 성명했고, 그 친필성명이 그쪽의 규장각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태진, 신용하교수에 의해서 그쪽의 5월 12일부, 13일부, 14일부, 동아일보를 비롯한 중앙급 신문들이 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쪽에서는 왜 오늘 회담에 나와서까지, 더욱이 그쪽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측 정무원총리가 편지로서까지도 이 문제를 바로잡을 데 대해서 제기했는데, 65년도 잘못 체결된 제2조를 내걸고 북에서는 밀치지 말라, 우리가 일본하고 해결하는데 력사학자들 세미나나 하자, 이런 태도로 나오는가? 이것이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사대근성적인, 애국애족이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쪽의 한일조약 제2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서 체결 안된 조약을 체결된 조약으로 인정해주었는가? 이제 이것까지도 바로 안잡으면 제3의 을사5적들이 되고 싶은가?

남(임동원) : 자, 빨리 첫발언이나 하세요.

북(김정우) : 다음, 우리가 이것에 공동대처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 차원에서 토론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이것은 조국이 분열되기

전에 일제와 구조선간에, 정부와 정부 사이에 체결된 조약을 바로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국과 당국이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그 어느 쪽 당국 하나만이라도 일본과 대상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서에다가, 기본합의서 제6조를 보시오. 그 쪽 총리 통지에도 지적인 것처럼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대처한다.』고 했으면, 합의서가 채택된 지금에 와서 일본 당국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 역사를 바로잡는 문제는 반드시 북남이 힘을 합쳐 당국이 당국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것을 학술단체에다 미루고 당국과의 이와 같은 문제는 피하려고 하는가? 저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 문제를 놓고 보게 되면 사회문화공동위원회... 우리 분과가 당국 차원에서 응당 이것을 취급하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정무원총리동지는 그쪽 정원식총리에게 고위급회담의 테두리 안에 있는 협력·교류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취급하자. 그런데 그쪽에서 어떻게 지금 나왔는가? 협력·교류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것을 피하고, 사회문화공동위원회가 나오면 그때 가서 학술단체에서 학술적으로 다루자.

이것은 사회문화공동위원회가 나온 다음에 학술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응당 협력·교류분과위원회에서, 당국차원에서,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것을 늦잡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 일본당국이 과거사를 잊고 군사대국으로 부상하려고 시도하는 조건에서 하루속히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겠다. 지금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자기가 끼친 죄에 대해서 똑바로 사죄를 하지 않고 그 사죄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늦추면서 사회문화협력·교류공동위원회 나온 다음에 학술적으로 다루자고 미룰 수 있는가?

이렇게 놓고 볼 때 그쪽에서는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뒤로 미루는 것은 사대근성의 표현으로 문제해결을 회피하는 것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의 제의를 받아서 협력·교류공동위원회에서 공동대처안을 토론해야 된다는 것을 명백히해 둡니다.

임선생이 말씀할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남(임동원) : 발언문 먼저 마저 끝내세요. 같은 내용이 아니겠어요?

북(김정우) : 좋습니다. 발언문 넘겨 주시오.

<北側基本發言>

림동원위원장과 남측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외인민들의 기대와 관심속에서 북남고위급회담 협력, 교류분과위원회 제5차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이 민족앞에 북남사이의 협력, 교류를 원만히 실현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데 대한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안고 이렇게 마주앉아 첫 회의를 시작한 때로부터 벌써 석달이 지나갔습니다.

그사이 우리는 네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와 네차례의 위원접촉을 가지고 토의를 거듭함으로써 북남합의서의 리행을 위한 협력, 교류분과위원회

사업에서 일정한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여러차례의 접촉을 통해 쌍방은 부속합의서를 단일합의서로 할데 대하여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부속합의서 내용토의에서도 아직 완전한 합의는 이룩하지 못하였지만 적지 않은 조항들에서 합의점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초에 열린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쌍방은 오는 9월 5일까지 부속합의서토의를 끝내기로 합의하고 북남경제협력, 교류공동위원회와 북남사회문화협력, 교류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또한 쌍방은 북남합의서발효후 첫 선물로서 조국해방 47돌을 계기로 북과 남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과 온 겨레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기 위한 특례적인 사업으로 로부모방문단과 예술단을 교환할데 대하여서도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북남합의서의 리행을 위한 협력, 교류사업에서 이룩한 공동의 성과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남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하며 북남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면 그에 장애를 조성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제반사태는 북남합의서의 리행은 물론 우리 분과위원회 회의전도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 이후 귀측은 난데없이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 무슨 《사건》을 걸고 《대북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북남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는가 하면 그 무슨 《핵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반대하는 반공화국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리는 한편 그 누구의 《핵문제》가 해결

되지 않는한 북남합의서리행을 류보하겠다고 선언해나셨습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귀측이 외세와 함께 《핵문제》를 걸고 우리에게 대해 《제재》와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할데 대해 모의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북남합의서를 리행하지 않으려는데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북남합의서리행을 차단하려는 귀측의 속심은 최근 며칠전부터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있습니다.

귀측이 보도한바와 같이 6월 20일 귀당국과 《민자당》은 《당정회의》를 열고 《남북상호핵사찰》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로부모방문단교환 등 《인도적차원의 교류》를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를 《류보》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북남고위급회담 귀대표단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핵상호사찰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제8차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부속합의서를 발효시킬 수 없게 될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북남교류를 차단하겠다는 귀측의 이 《결정》은 직접적으로 북남교류의 전반문제를 협의하고있는 본 협력, 교류분과 위원회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선언으로 된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귀측이 북남합의서의 전반적리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얼마나 집요하게 행동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사실상 귀측이 들고나왔던 이른바 《핵문제》는 얼마전에 실시된 우리의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이 우리의 핵시설을 사찰하고 그것이 평화적목적을 위한것이라는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는데 대해서는 널리 알려

진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귀측은 사실상 북남합의서리행을 차단할 구실을 잃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런 형편에서 귀측은 어떻게 하나 북남합의서리행에 제동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2의 핵소동으로서 또다시 《상호핵사찰》문제를 들고나오게 되었습니다.

귀측이 떠들고있는 《상호핵사찰》이 제기일에 실시되지 못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귀측에 그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북남핵사찰이 쌍방사이에 합의된 기일에 실시되지 못하게 된것은 귀측이 비핵화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합의서토의를 태공하고 사찰대상에서 미국의 핵무기와 핵기지를 제외하려고 하였기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귀측은 북남핵사찰문제를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우리를 시비할 아무런 리유와 구실도 있을수 없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는 우리의 《핵문제》를 걸고 나오다가 그것이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 의해 허구라는것이 드러나게 되자 이제와서 《상호핵사찰》문제를 걸고 부속합의서를 합의한 기일에 발효시키지 않으려 하고 모든 《남북교류》를 차단하겠다고 하는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것입니다.

이것은 귀측이 생억지를 써서라도 북남합의사항들을 리행하지 않으려 하고있으며 북남관계를 북남합의서발효 이전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 세우려 하고 있다는 것을 더 론의할 여지없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귀측이 무엇때문에 그렇게도 북남합의서리행을

가로막으려 하고있고 또 그것이 누구의 조종에 의한것인가 하는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와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가로막고 귀당국으로 쏠리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불평불만을 오도하며 중요하게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격화시켜 미군철수를 막고 우리를 《고립》시켜보려는 외세의 전략을 뒤받침해보려는데 있다고 봅니다.

내외의 여론이 두려워 회담탁에 마주 앉아서는 합의서에 서명하고 돌아앉아서는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전에 그것을 뒤집어엮는것은 이미 20년전 7.4공동성명이 발표되던 그때부터 써온 귀측의 수법입니다.

귀측은 이번에 마치도 로부모방문단문제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에는 관심이 있는듯이 위장하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한갓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것입니다.

귀측이 모든 북남합의사항의 리행을 차단함으로써 북남관계가 악화되게 되면 로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도 실현될 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더우기 귀측이 정략적목적으로부터 방문단교환을 추진하려하고있는것이 명백한 이상 우리는 이에 대해 신중히 대하지 않을수 없는것입니다.

모든 사실로 미루어보아 우리는 귀측이 외세의 정책적 요구와 귀측 내부사정으로 하여 북남합의사항들을 리행하지 않으려 한다고밖에 달리 볼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지금까지 부속합의서토의에서 귀측이 그 부당성이 이미 명백해질대로 명백해진 협력, 교류당사자들에 대한 당국의 승인문제를 계

속 고집하고있으며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래왕에 저촉되는 법적제도적장치를 철폐할데 대한 우리의 의견도 받아들여 하지 않으며 인도적문제의 해결을 쉽게 합의할수 있는 방안도 접수하려 하지 않고있는것은 다 북남 합의서리행을 차단하려는 근본립장에 기인된다고 인정합니다.

력사적인 북남합의서와 제7차 북남고위급회담 합의사항은 북과 남이 온 겨레앞에 그 리행을 확약한 공동의 통일촉진강령입니다.

북남합의서와 쌍방합의사항들은 그 어느 일방의 정략에 따라 그 리행이 류보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며 무조건 성실히 리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쌍방이 합의사항들을 리행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실지로 리행하지 않으려 하는가 하는것입니다.

쌍방회담에서 어느 일방이 이미 이룩된 합의사항을 리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아무리 회담을 거듭하고 토론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일로 될것입니다.

다시말하여 귀측이 로부모방문단교환 등 《인도적차원의 교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북남교류를 차단하겠다고 한 조건에서 본 협력, 교류분과위원회사업의 전도문제는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오늘 회의에서 귀측은 쌍방 합의사항의 리행과 본 분과위원회사업에 대한 똑똑한 태도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귀측은 우선 북남핵사찰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오는 제8차 북남고위급 회담때에 부속합의서들을 발효시킬수 없을것이라고 한것이 사실인가 아

닌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저의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혀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귀측은 북남핵사찰이 실시되지 않는한 《남북관계의 그 어떤 진전도 기대할수 없다》고 하는 진의도가 어디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도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더우기 귀측은 북남핵사찰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모든 《남북교류》와 합의사항리행을 《류보》하겠다고 하였는데 도대체 《류보》시키겠다는 《교류》란 무엇을 념두에 둔것이며 앞으로 북남합의서를 어떻게 하겠다는것인지 그 속심을 숨김없이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귀측의 립장표명이 없는 조건에서는 부속합의서 토의를 아무리 해도 그것은 무의미한것으로 될것입니다.

남측위원 여러분!

나는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귀측의 명백한 해명을 요구하면서 다음으로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동지가 귀측총리에게 편지를 통하여 제기한 일제에 의해 외곡된 우리 민족의 과거력사를 바로잡기 위한 중대한 문제를 협의할것을 제의합니다.

귀측도 아는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연형묵동지는 6월 20일부로 된 귀측총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과거 일제에 의하여 외곡날조된 조선침략력사를 바로잡기 위하여 일본당국으로부터 과거 일제가 비법적으로 조선을 침략하고 식민지통치를 강요해온데 대한 공식 사죄와 보상을 받아 낼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현 일본정부가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의 비법성을 인정하고 그를 무효화하는 공식선언을 발표하며 일제의 조선에 대한 불법강점과 관련되는 위조된 력사기록들과 모든 불법문서들을 개정 또는 폐기하는 응당한 조치를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우선 본 협력, 교류분과위원회에서 긴급의제로 토의하고 공동결의안 같은것을 채택할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우리의 이 제의는 정의와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환영할 애국애족의 발기로 된다고 인정합니다.

최근 북남력사학자들에 의하여 일제가 구조선에 강요하였던 《조약》들이 허위날조된 비법적인것이였다는 진상이 자료적으로 더 명백히 밝혀짐으로써 일제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가 불법무도한 대정치협잡행위였다는것이 움직일수 없는 력사적인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제가 구조선에 강요한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은 당시 전제군주 국가였던 구조선황제의 인허와 수결, 옥새날인을 받지 못했거나 황제의 가짜수표가 있는 완전히 비법적인 날조된 문서장들이였습니다.

일제는 바로 이러한 비법적인 《조약》들을 구실로 조선을 강점하고 무려 41년간이나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노예통치를 강요하였으며 그 한세기 동안이나 우리 민족과 세계인민들을 기만해왔습니다.

더우기 일본당국은 그 력사적사실이 폭로된 오늘에 와서까지 《을사5조약》을 비롯한 구시대의 《조약》들이 《합법적으로 체결》되었고 《유효하게 실시되었다》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저들의 만고대죄에 대

한 사죄와 보상을 회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천만 우리 민족은 장장 41년동안이나 우리 말과 글, 이름까지 빼앗고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과 문화적재부를 깡그리 앗아가다 못해 조선녀성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순결성마저도 강탈하여간 일제의 야수적만행이 바로 일제가 비법적으로 날조해낸 허위문서에 의해 강행되었다는 사실에 접하여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오늘 《을사5조약》을 비롯한 과거 《조약》들의 비법성을 날낱히 파헤치고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는것은 구천에 사무친 우리 겨레의 원한을 풀고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키기 위하여 절박하게 나서는 민족공동의 중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해결에서는 북과 남이라는 지역적관념이나 사상과 제도, 신앙의 차이가 문제로 될 수 없습니다.

강도일제의 범죄적인 력사위조사건자체가 우리 나라가 분렬되기 이전에 발생된 문제이고 나라의 분렬도 바로 을사년의 망국을 강요한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통치에 그 화근을 두고있다는것은 자명한 력사적사실입니다.

북남사이에 서로 화해하고 협력할데 대한 력사적인 북남합의서도 채택발효된 현조건에서 우리가 공동대처하는 문제에 주저할 리유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일본이 아세아에서 군사대국화를 다그치면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는 오늘 북과 남이 일제의 과거죄행에 대한 사

죄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나가는것은 우리 후대들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더우기 잘못된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는 문제는 성격상 바로 우리 분과 위원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오늘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지난날 일제가 외국 날조한 죄악에 찬 조선침략사를 바로잡고 일본당국으로부터 응당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북과 남이 공동으로 대처해나갈데 대한 문제를 긴급의제로 토의하고 북남의 공동의지를 담은 《공동결의문》같은것을 채택할데 대하여 합의하자는 것을 정중히 제의합니다.

한편 며칠전 조선력사학회는 귀측 《한국력사연구회》에 일제에 의하여 강요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잡을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북남력사학자회담을 가질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북과 남이 일제의 의하여 잘못된 민족사를 바로잡기 위한 력사학자들의 회담을 가질데 대한 이 제의에 대해 북과남의 당국은 그것이 성사되도록 조건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입니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문제이며 민족의 과거력사와 후대들의 장래에도 직결되는 이 문제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현시기 자주와 사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기본척도로 된다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만약 어느 누가 이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거나 경원시한다면 그것은 민족적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고 민족사의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것으로 되며 민족의 자주적립장을 저버리고 외세에 아부하고 빌붙는 사대근성에

포로되어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것으로 될것입니다.

귀측은 우리 제안의 중대한 의의를 깊이 깨닫고 겨레와 민족앞에서 지닌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인민군중군기자 라인모로인송환문제입니다.

다아는바와 같이 라인모로인은 원래 이미전에 우리측에 송환되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 인생말년에 의지가할데 없는 불구의 몸으로 생을 겨우 유지해가고있습니다.

지금 내외인민들은 라인모로인의 송환문제에 대해 로부모방문단교환사업보다 더큰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를 자기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려보내는것은 인도주의적견지에서 보나 북남관계개선의 요구에 비추어보나 매우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라인모로인을 로부모방문단교환사업 이전에 돌려보낼데 대한 의사를 이미 귀측이 표시한 조건에서 오늘 회의에서 그를 언제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 송환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면 될것입니다.

이상에서 나는 오늘 회의에 립하는 우리측의 립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진정으로 북남합의사항을 존중히 여기고 북남합의사항을 리행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 민족의 존엄을 지키는데 공동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다면 부속합의서내용토의에 앞서 우리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옳은 대답을 주어야 할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귀측의 명백한 대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임동원) : 귀측의 발언을 듣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 부여된 임무는 부속합의서를 조속히 작성해서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우리에게 부과된 중요한 임무입니다. 지금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될 부속합의서문제를 논의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진척이 부진한 상황인데, 다시 다른 문제를 걸고 들어와서 일종의 지연 전술을 쓰려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중에는 일부 오해된, 잘못 해석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일부 고의적으로 지연전술을 쓰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느낌을 솔직히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기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첫발언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입장을 명백히하였습니다. 예상을 해서 미리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다 되풀이해서 이야기해야 하겠는가 하는 의문도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서 남북간에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 비핵화공동선언을 그 선언에 담긴 대로 약속한 대로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사찰규정을 만들어서 상호사찰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귀측은 국제사찰은 받으면서 상호사찰은 회피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핵통제공동위원회가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양보를 하고 노력을 해서 해결해 나가야지, 다른 데까지 들고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떠든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이 갑니다.

나는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김위원장이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한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해서 해결의 길을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측이 약속했으니, 비핵화공동선언을 같이 채택하고 발효시켰으니 지키리라고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서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경우 국제핵사찰만 받고 남북간의 사찰을 회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명백히하고, 그런 우려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핵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은 사실상 남북 상호사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북간 상호사찰이 실시되어야만 남북 관계의 모든 문제도 잘 풀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의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귀측에서 이러저러한 발언, 언론에 일부 보도된 것을 트집을 잡고 있는데, 얼마나 올바르게 보도되고 표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측의 입장은 제 첫발언을 통해서 명백히 말씀드렸습니다. 핵문제의...

북(김정우) : 표현을 명백히하십시오, 말을 써도 트집이라고 그러면 안되지요.

남(김인호) :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쪽의 위원장이 발언하실 때도 우리측에서 한마디도 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하였습니다. 우리 위원장 발언을 끝까지 경청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북(김정우) : 듣긴 들겠는데 상대방을 존중해서 문화어를 쓰라는 것입니다.

남(임동원) : 그래서 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서부터 갖고 있는 태도입니다. 핵문제를 하루속히 남북이 협력해서 해결하자 하는 입장으로 많은 접촉을 해왔고,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또 서로 입장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논쟁도 벌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핵문제 해결 없이 어떻게 다른 모든 문제들이 순조롭게 풀리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 남쪽에 사는 전 국민들의 아주 공통된 우려인 것입니다. 따라서 핵문제를 빨리 해결해 가지고, 즉 상호사찰을 빨리 실시해 가지고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게 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어느 누구가 뭐 어떻다 어떻다 하는데,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하였듯이 남북간의 합의사항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행·준수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은 반드시 그쪽도 지켜야 하고 우리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남북이 합의한 대로 부속합의서를 빨리 만들고

공동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가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핵사찰규정도 마련하고 필요한 합의도 하고 상호사찰도 실시함으로써 조그만 의혹이라도 풀고 남북관계를 빨리 진전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그동안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내주에 남북쌍방이 다시 열기로 했다 하는 것은 불행중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핵통제공동위원회의 활동에 기대를 걸어 봅시다. 그리고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밀어 주도록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입니다. 뭐 안하겠다, 기본합의서를 안지키겠다, 부속합의서를 안만들겠다, 또 공동위원회를 발족 안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정부의 위임을 받아서 정식으로 정확하게 이 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날조된 지난날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인데,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일본식민지통치에 구실을 주었던 이러저러한 모든 문서들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누가 가짜 서명하였든 어쨌든간에 이것은 없었던 것이다.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것을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그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이 학계에서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사료들이 발굴됨에 따라서 더 많은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연구를 계속시키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측도 역사학자들간에 회의를 하자고 제의하였습니다만, 그것뿐이겠습니까? 다른 문제도 일제에 항거한 의병운동이라든가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도 발굴해내고 같이 정리하고 이해를 같이하고 바로 잡고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 부속합의서를 빨리 만들고 그 부속합의서에 토대를 두어 가지고 이런 일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자는 것입니다. 기틀을 마련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부속합의서를 서로 검토하고 채택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딸리는 이 마당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는 하루속히 시간을 앞당겨서 부속합의서 합의를 보고 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많은 학술적 연구,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확실히 밝혀둡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더 이야기할 것은 귀측에서 이인모노인 송환 문제를 이야기하였습시다만, 이와 같은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어디 이 사람 하나뿐이겠습니까? 통칭 천만 이산가족이라고 하고 그중에는 이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들도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 부속합의서를 빨리 해결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부속합의서 안에 재결합문제도 합의를 하자고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순리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대개 이 정도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북(김정우) : 임선생이 이제 몇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였는데, 그것에 대해
서는 우리가 명백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서 어떤 때는 부속
합의서를 비롯하여 기본합의서를 전제조건 없이 빨리하자 이렇게 이야
기하고, 또 어떤 때는 핵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이 없이는, 근원적인 해
결 없이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그
러니까 우리로서는 그쪽의 립장이 도대체 무엇이나? 핵문제와 기본합
의서, 그 다음에 이 부속합의서의 기본합의서 리행, 이걸 결부시켜서
지금 보자는 것이냐, 안보자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기 어
렵습니다. 그러나 임선생의 오늘 기초발언에서 『핵문제의 해결이 없는
한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우며...』했기 때문에 문장
대로 우리는 리해하겠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왜 핵문제와 기본합의
서 리행을 결부시키는가?

또 다른 하나는 핵문제를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
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쪽에서 6차 고위급회담 때 기본
합의서가 발효된 다음에 마치 국제사찰을 우리가 안받은 것처럼, 또 무
슨 지연전술을 쓰는 것처럼 이래 가지고 왁작 떠들었습니다. 국제사찰
을 빨리 받으라, 그걸 안받으면 북남 모든 관계 진전이 어렵다... 정원
식국무총리가 2월 25일날 이야기했죠? 3월 3일날, 3월 11일날, 4월 25
일날 왁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고인민회의에서 4월 8일날 결정을 하고 정정당당한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국제원자력기구 규정의 사찰을 끝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6월 20일날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 한스 블릭스가 기자회견에서, 6월 관리리사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모릅니까? 북의 핵개발은 평화적인 데에만 목적을 두고 있다. 핵무기 개발의 상태에는 있지 않다. 명백히 국제원자력기구 총국장 한스 블릭스가 말했던 말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쪽에서는 또 남북상호사찰을 가지고 합의서 리행을 류보한다, 무엇은 안한다, 부속합의서를 8차회담 전에 내오기 힘들다, 이렇게 지금 떠듭니다. 그러면 상호사찰이 대체 누구 때문에 못되고 있는가? 두달 정도에서 내놔야 될 핵통제공동위원회 부속합의서는 지금 누가 내놓고 누가 안내놓았습니까? 임선생, 그쪽에서 내놨어요?

자, 부속합의서 내놓게 된 것도 안내놓았지, 그 다음에 비핵화공동선언, 임선생이 나와서 문장을 합의한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남(임동원) : 아니 김선생, 오늘 어떻게 우리 핵통제공동위원회 하자는 겁니까? 내가 핵문제 처음부터 관여했던 사람인데, 교류·협력분과위원회에서 왜 이러세요?

북(김정우) : 임선생이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거 피하지 마시오.

남(임동원) : 핵문제 관련 세부적인 내용을 따지자고 하면...

북(김정우) : 아, 가만있어요. 내가 임선생 말을 인내성 있게 들었으면 아까 김인호선생이 말한 것처럼 내말 들으라요.

남(임동원) : 들을게요.

북(김정우) : 왜 그런가? 그쪽의 기본발언에서 뭐라고 썼나 보라요. 『셋째, 핵문제의 해결이 없는 한』하고 핵문제를 걸었기 때문에 나는 문제를 삼은 거예요.

남(임동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북(김정우) : 자, 비핵화공동선언 임선생이 나와서 우리 최우진선생이랑 며칠이나 토론했죠?

남(임동원) : 그렇습니다.

북(김정우) : 4조에다 뭐라고 썼어?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해서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한 대상들에 한하여 북남핵통제공동위원회가 비준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그렇게 되면 이대로 합의하는 대상들에 하자고 그래야지, 왜 특별사찰을 그쪽에서 중뿔나게 제기를 합니까? 왜 앉아서는 합의해 놓고 돌아앉아서는 또 딴 소리를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사찰대상도 쌍방이 어떻게 합의했는가? 비핵화공동선언도 그렇고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핵무기, 핵기지에 대해 했으면 핵무기, 핵기지,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걸 하는 거지, 군사기지는 또 무슨 영뚱하게 군사기지입니까?

그 다음에 핵무기를 소유한 나라들사이에만이 할 수 있는 무슨 상호주의원칙을 대칭성과 결부시켜 가지고 동시사찰을 제기하는데, 우리측에 핵무기와 핵기지 없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데, 그쪽에 1,000여개 핵무기를 갖다 놓고 그쪽의 핵기지, 핵무기 가진 사람하고 우리하고 동시사찰이 무슨 동시사찰이오? 그게 핵무기를 소유한 나라들이 사용하는

거지.

처음부터 그쪽에서 우리한테 의심한 것은 영변의 핵물질 개발문제 아니오? 그러면 핵물질, 핵시설에 대한 문제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에 의해서 명백해졌는데, 그러면 동시사찰은 어디다 대고 동시사찰인가?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합의한 내용을 자꾸 돌아앉아 뒤집습니다.

오늘 우리 외교부대변인 성명 나온 걸 명심해 보시오. 우리는 명백히 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본 기지 외에 의심이 되는 문제가 있다면 국제원자력사찰 또 받는다. 안받겠다는 게 아니다. 그러나 북남간에는 명백히 하자. 합의서대로, 비핵화공동선언에 지적된 대로, 원칙을 합의한 대로 하자. 왜 자꾸 다른 소리 하는가?

여기 지금 그쪽에 다른 정략적 목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미국의 정략에 그쪽에서 지금 발을 맞추고 있다. 지금 미국사람들은 뭐인가 핵소동을 피워 가지고 핵위협으로 우리를 고립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합니다. 천만에, 오산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에 의해서 이것이 잘 안되니까 제2의 핵소동을 지금 벌여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왜 여기에 동조하는가? 기본발언에서 말한 것처럼 조·미 및 조·일, 자기내부사정,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걸 또 걸어서 모든 북남간에 맺어진 기본합의서 리행을 류보하면서 부속합의서도 8차 회담 전에 나오기 어렵다... 그럼 부속합의서 나오기 어려운데, 부속합의서 토론 왜 하는가? 아까 임선생이 여기 나와 앉아서 부속합의서 토론 부지런히 해 가지고 이것도 하기 곤란한데 무엇 때문에 긴급의제

토론하겠는가, 뭐 이렇게 말했는데, 부속합의서 8차 회담 전에 나오기 어렵다고 공공연히 기자들 앞에서 말해 놓고는 이게 뭣입니까?

그쪽에서 항상 무엇이 제기되면 오보다 오보다 하는데, 아 어떻게 돼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기자들은 시대의 선각자이고 사회여론의 대변자입니다. 남쪽 기자들이 그렇게 계속 오보할 수 없어요. 1차 회담 때 그쪽에서 라디오한국 사건 때도 오보다, 오보인가? 라디오한국이 자기 나라에 있는지 없는지, 자기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또 이번에 와서는 아마 이게 오보라고 할 겁니다. 가만 지금 인상을 보니까... 절대로 오보가 아니예요. 이동복대변인에게 물어보시오.

남(임동원) : (웃음)자, 이제 다 됐어요?

북(김정우) : 가만있어, 좀 더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날조된 문건, 날조된 문건에 대해서는 그쪽에선 지금 우리의 요구를 잘 모릅니다. 그쪽에서는 65년 6월 22일날 기본조약 제2조에 뭐라고 했기 때문에 다 계산됐다 이근데, 우리는 그 2조를 지금 잘못 협정했다는 겁니다.

그 2조를 보시오. 그쪽에서 지금 2조를 실례로 들었는데, 1910년 8월 22일 조약과 그 이전에 체결한 조약과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체결되지 않은 걸 확인한 겁니다. 체결된 게 아니다. 체결되지 않은 조약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쪽에서 조항을 만들자면 그렇게 만들 게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1910년 8월 22일에 맺은 조약과 그 이전에 맺은 조약 및 협정은 무효임을 확인하며, 1905년에 맺은 을사5조약과 1907년에 맺은 정미7조약은 체결되지 않은 조약이었다는 것을 재확

인한다.』 이렇게 해놔야 민족한테 자기 의무를 다한 거예요. 딱 일본사람들이 말하도록, 체결된 조약을 무효로 했기 때문에 내 의무를 다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할 소리가 아니라 일본사람들이 할 소립니다.

그 다음에 국어교과서도 고쳐야 됩니다. 그쪽에선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일제에 의해서 1905년에 맺은 을사조약은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강제로 체결하려다가 체결되지 않은 허위 문서였다고 명백히 지적해 가지고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지금 북과 남의 많은 인민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더욱이 우리가 똑똑히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후대들도 모릅니다. 후대들이 똑똑히 알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는 죄를 범하지 말자.

이게 리산가족 100명 로부모방문단보다도 민족력사를 바로잡는 중대사이기 때문에, 또 5월달을 계기로 해서 그쪽에서 규장각총서를 발행하면서 황제의 칙령도 찾아내었고, 우리는 황성신문에서 해당하는 자료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을 끌지 말자. 더욱이 현 일본당국이 사죄를 똑똑히 하지 않고 오만무례하게 PKO법령을 지금 통과시키고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시도하기 때문에 똑똑히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아야 되겠다. 시기적으로 이걸 늦출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협력·교류분과위원회가 성격에 맞게끔 부속합의서 토의 합의 전이라도 이걸 하자고 제의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태여 그쪽에서 옳다고 생각하면, 무엇 때문에 부속합의서 토의하고, 사회문화협력공동위원회를 내오고, 그 다음에 학자들 토론에다 붙이자고 이렇게 하는가? 더욱이 총리 회답편지에서 우리가

일본하고 양자간에 해결하니까 그쪽에서는 비치지 말라는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쪽에 한한 문제입니까? 민족의 존엄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부속합의서도 토론하고 이것도 하자.

우리 부속합의서 안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자. 하는데 입장을 똑똑히 하라우. 8차 회담 전에 부속합의서를 내오겠는가, 안내오겠는가? 그 다음에 핵문제에다 걸고 기본합의서 리행을 자꾸 류보하겠다는 말을 하겠는가, 안하겠는가? 안하겠다고 하면 토론하자. 하겠다고 하면 똑똑히 그 문제를 계산하고 우리가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핵사찰문제는 상호핵사찰 받자는 거예요. 우리 안받겠다는 것 없어. 아, 우리 핵무기, 핵기지 없는데 왜 안받겠어? 상호사찰의 기본인 4가지 중에서 우리 2가지 받았단 말이야. 핵무기, 핵기지 우리 나라에 없어. 핵물질, 핵시설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 사명에서 명백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지금 발언하는 데서 아주 온당치 못하고 자중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세계가 핵개발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다 인정하는데, 어떻게 돼서 그쪽에서만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는 한계가 있다느니, 상호사찰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한계가 있다는 말은 그쪽에서 지금 아마 세계적으로도 먼저 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마 그쪽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겠는가? 그쪽에도 지금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많이 받고 있고 부산, 고리시를 비롯해 가

지고 9개의 원자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찰을 받으면서 뭔가 숨긴 게 있어 자기 경험으로부터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이 한계가 있다고 보는가?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이 한계가 없다고 봅니다. 할 것 다 한다구요.

그런데 그쪽에선 지금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사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말고, 자기의 그런 사명과 목적에 맞게끔 발언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임동원) : 우리 김위원장께서...

북(김정우) : 가만있어요.

남(임동원) : 아직 안끝났어요?

북(김정우) : 그 다음에 리인모로인의 문제입니다. 리인모로인 문제는 그 쪽에서 지금 태도를 변경하는데, 임위원장이 서울에서 나하고 토론할 때도 그랬고, 또 김종휘선생하고 같이 왔을 때도 그랬고, 그후에도 그랬고, 또 그쪽의 최근 방송에도 그랬고... 8. 15 전에 리인모를 돌려보낸다는 말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보니까 부속합의서를 토론하고 그 다음에 될 다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이와 같은 입장을 표시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남(임동원) : 아니 8. 15 이전에 돌려보낸다는 얘기를 내가 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문제들이 검토될 수 있다는, 귀측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검토해

봅시다 하는 것 아니었어요?

귀측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이인모문제와 결부해서 제시하려고 그랬는데 조건 없이 제시하니, 이인모문제에 대해서도 성의를 보여달라고 한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검토해 볼 것이다, 이런 것 아니에요? 내가 언제, 무슨 권한이 있어서 돌려보내 준다, 안된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북(김정우) :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검토도 안하고 뒤로 미루겠다는 겁니까?

남(임동원) : 검토해 봤는지 안해 봤는지는 조금 기다려 보세요. 검토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걸 사람을 지명을 해 가지고,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돌려보내 준다, 안해 준다 하는 겁니까?

북(김정우) : 그건 김종휘선생이랑 가서 잘 토론해보시오.

남(임동원) : 글썄, 검토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의 공식입장이었어요.

북(김정우) : 그러니까 8. 15 전에 돌려보내 주는 문제를 그냥 검토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말하는 것처럼 부속합의서를 토론하고 그 이후에 본다는 겁니까?

남(임동원) : 그쪽에서 이번 8.15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문제를 다른 문제와 연계시킴이 없이 조건 없이 실시하겠다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공개적으로도 얘기를 했고, 연설문에서도 나왔고... 그러면서 접촉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모노인 송환문제도 이쪽에서 조건없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하겠다 한 것이 우리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뭐 보낸다 안보낸다를 어떤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런 말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김정우) : 그럼 그쪽의 방송에서 그 문제를 푼 건 뭐예요? 8. 15 전에 리인모를 돌려 보낸다... 그건 우리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남(임동원) : 글썄, 우리는 북측에서처럼 모든 방송, 신문이 당의 기관이라든가 정부의 기관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남쪽은 여러분이 늘 얘기하듯이 다원화사회 아닙니까? 모든 신문사들이 국영이 없잖습니까? 방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사정을 다 알면서 감안해서 봐줘야 되지 않아요?

아까 핵문제도 그래요. 핵문제도 이러저러한 장소에서, 세미나 하는 장소에서 이러저러한 말이 나왔든가, 또는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투로 보도가 됐다든가 하는 일이 우리 사회에는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내가 위임을 받아서 오늘 명백히 우리의 입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부속합의서를 내오겠느냐, 안내오겠느냐? 이거 질문이 안되는 질문이에요. 왜 그런 의심을 갖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보도들에서 그런 자극을 받았다, 그런 얘기겠지만 우리의 입장은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그대로 꼭 지키자, 반드시 지키자, 그리고 부속합의서 내오자, 기간 내로 반드시 빨리... 사실은 벌써 내왔어야 되지. 지난 5월달에 내왔어야 되지요. 그리고 공동위원회 발족시켜 가지고 실천에 들어가자...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공식으로 우리가 북쪽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중에 어떤 학자들은, 어떤 논설위원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얘기한 것이지요. 핵문제 해결 안 되면 다 집어치우라, 연계시켜라, 뭐 그렇다, 안그렇다... 이걸 다원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 사람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이 우리 사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강점이고 장점입니다. 그런데 아마 북쪽에선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혼선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 입장을 분명하게 오늘 제가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김정우) : 그래 그 립장이 뭐입니까? 분명히 밝히는 립장 내용이 뭐입니까?

남(임동원) : 네가지 지금 분명히 밝혔잖아요? 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 언 반드시 서로 준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수한다 이것입니다.

북(김정우) : 준수하는 것은 명백한데, 부속합의서에 대한 립장이 무엇인가? 부속합의서에 대한 립장이...

남(임동원) : 그 다음에 두번째, 부속합의서를 약속한 날짜 이내에 반드시 합의·채택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북(김정우) : 그게 당국의 립장입니까?

남(임동원) :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분명히 여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북(손종철) : 전제 없이 말이죠?

남(임동원) :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제 없이 부속합의서 내고 동시에 핵통제공동위에서 사찰규정 만들어서 상호사찰 실시하자는 것입

니다.

북(김정우) : 그럼 좋습니다.

남(임동원) : 지금 상호사찰이 왜 필요한가, 국제사찰이 됐으면 되는데 왜 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건 제기거리가 안돼요. 왜? 남북간에 이미 합의봤지 않았느냐, 상호사찰 하자고...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주에 다시 재개가 되니 거기서 논의하면 됩니다.

내가 오늘 김정우위원장께서 핵문제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평가합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논할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을 절약하겠고, 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 잘 해결 되도록 우리가 밀어주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북(김정우) : 가만, 미안합니다. 임위원장, 요거 하나 물어 보자요. 이제 임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는가? 전제 없이 부속합의서는 8차 회담 전에 나오는 게 당국의 립장이다 라고 그랬지요?

남(임동원) : 그렇습니다.

북(김정우) : 그러면 그쪽의 당정회의에서 뭐라고 했는가? 남북한 상호핵사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8. 15고향방문단 교환 등 인도적 차원의 교류를 제외한 모든 남북교류를 류보하기로 하였다, 모든 남북교류를 류보한다... 여기엔 부속합의서 토의가 들어 안갑니까?

남(임동원) : 글썄, 그것이 귀측에서 자꾸 우리더러 왜 오보다 어떻게 핑계를 대느냐 그러는데, 우선 『당정회의』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공노명 핵통제공동위원장이 민자당대표위원이신 김영삼위원께 핵문제를 설명해 드리는 기회였어요.

당정회의는 무엇인가 하면 당대표들하고, 많은 인원들 10명이고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정부대표하고 마주 앉아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서 보고드리는, 설명드리는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정회의라고 보도가 되어 버렸고... 오보다, 오보 아니다, 자꾸 그런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북(김정우) : 그러니까 당정회의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까? 이 회의가 당정회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방송이 보도했는데, 기독교방송은 당정회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보도했다 이거지요?

남(임동원) : 글썄 그건 내가 어느 방송이 어쨌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든지간에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핵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당최고위원에게 가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설명드리는 보고회의를 가졌어요. 공노명대표 혼자 갔고... 또 뭐 수행원이 갔겠죠... 그쪽에서 최고위원하고 두세사람이 앉아서 같이 설명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당정회의인가, 아닌가? 이걸 너무 자명합니다. 그리고 참석인원도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앞뒤를 다 읽어보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북(김정우) : 아니 임동원선생, 내가 앞으로 그쪽하고 협력·교류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인식을 좀 바로 해야 되겠어요. 당정회의 정의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기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자당 대표최고위원과 몇사람이 참가하면 당을 대표하는 거고, 또 당국을 대표해서 핵문제 토의의 외교안보연구원장 이하 몇이 참가했으면, 그것이 핵문제를 위한 당정회의가 아니냐?

그게 아니라 하게 되면 당정회의 기준을 한번 설명하시오. 누구 누구 참가해야 당정회의인가? 좀 알고 지냅시다.

남(임동원) : 그것은 『당정협의』일 수도 있고, 또는 정부에서 가서 설명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정회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리고 그 장소는 이러저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당정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책결정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북(김정우) : 아, 글썄 당정회의에 누구 누구 참가하면 당정회의인가, 내 좀 알고 지내자 이거예요.

남(김인호) : 당정회의란 원칙적으로 당대표하고 정부측에서는 별일이 없는 한 총리가 나갑니다. 저쪽에서 당의 대표가 나오면, 총리 이하 관계 각료가 나갑니다. 그게 당정회의예요. 당정회의라고 할 때는...

북(김정우) : 당정회의란 총리가 나가야 당정회의입니까?

남(김인호) :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또 당정회의에는 『당정회의』라고 하는 이름이 정식으로 붙어요.

남(임동원) : 총리를 대신해서 다른 장관이 나가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요.

북(김정우) : 글썄 우리는 그쪽 규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남(김인호) : 우리 규정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북(김정우) : 기독교방송이 당정회의라고 했고, 결정한다고 했고... 또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은 가만 보니까 선거를 앞두고 유세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다 보니까 핵문제까지 다친 것 같은데, 이거 명백히해야 됩니다.

남(임동원) : 일부 신문도 그렇게 보도했어요. 당정회의라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북(김정우) : 신문에서 보도를 했지요?

남(임동원) : 그건 맞아요.

북(김정우) :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지...

남(임동원) : 글썄,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설명을 받아들이고...

북(김정우) : 그러면 정정보도가 나왔습니까? 당정회의가 아니고 당정회의에서 그렇게 모든 교류를 류보한다는 말을 안했다는...

남(김인호) : 그것이 우리 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귀측의 모든 언론이 정부가 마음대로 통제하는 국영언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언론기관이 잘못 보도할 수도 있고, 정정보도의 책임은 언론기관 스스로가 갖는 것이지, 정부가 무슨 정정보도의 책임을 갖습니까?

북(손종철) : 인호선생, 우리가 그 사이에 조금 고찰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왜 이 소리를 자꾸 하느냐? 1월 6일 미국 대통령 부시가 그쪽 최고 당국자한테 너무 분단관계의 진전이 빠르다고 했는데,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리가 조금씩 수집한 자료를 봐도 거기의 고위당국자들이 2월 25일부터 3월 10일 사이만도 4건의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번 6월에 우리가 국제사찰을 아주 원만히 받아 나간 이후에, 또 받는 도중에 다시 미국 대통령 부시가 불만족한다는 말을 했던 말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몇건인가? 6월 1일부

터 6월 24일 사이에 5건의 똑같은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임선생이 여기 세번째 항에다가, 아까 우리 위원장동무도 물었는데, 『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어렵다...』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이 뭐냐?

남(임동원) : 내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북(손종철) : 아니, 우리 얘기 들어보시오. 이거 지각있는 사람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무슨 소리냐? 자, 합의서는 하자, 그런데 핵문제 해결 안 되면 진전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소리냐? 핵문제 해결 없이는 합의서는 바랄 것이 없다, 이 소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리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지.

그럼 이 모든 10건의 고위급 발언들이 다 오보인가? 우리는 그렇게 안봅니다. 오보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러나 어떻게 신통히 모두 똑같이 6월까지 1차, 2차 이렇게 나오는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호상 핵사찰을 받고 그 결과가 만족하게 나오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믿지 못하겠다. 왜? 귀측에서 나온 출판물들에서 이미 미국이 86년부터 북에 대한 핵위협 조성을 위한 허위자료들을 홍보기관에 넘겨줬다는 자료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때로부터 북의 핵위협에 대해 압력을 가한다. 이걸 왜 그러냐? 자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날조라고 하는 거기의 출판물이 여러 권 나왔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인가? 앞으로 핵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것을 들고 나올 것이다. 따라서 이 모순된 점들에 대해서 명백히 임선생이

태도표명을 해야 우리가 합의서 토의를 빨리 진전시키고 이거 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남(임동원) : 손선생,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번째 말씀드린 『핵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 여기서 실질적이라는 데 신경을 쓰면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핵문제와 남북대화를 병행한다는 입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본합의서 채택하고, 비핵화공동선언 채택하고, 그 다음에 남북대화를 계속하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병행해 왔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국제핵사찰을 받고 해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앞당겨서 국제핵사찰을 받고 한 것은 평가가 돼요. 그러나 국제핵사찰을 받아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는 데는 유보적인 견해들이 있어요.

북(김정우) : 그 근거가 뭐니까?

남(임동원) : 그것은 내가 여기서 논할 성질들이 아니고 핵통제공동위에서 논하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그런 것을 떠나서 남북간에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 가지고 남북한 상호핵사찰을 하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마지막 고비인 것 같아요. 다들 잘 해결하겠지요. 기대해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핵문제 해결을 하면서 남북관계도 진전시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을, 모든 것을 유보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핵문제 의혹이 남아 있는 한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빨리 상호핵사찰 실시 하자, 그러면 남북관계가 빨리 진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북(김정우) : 아니 임선생, 그것은 임선생 말씀이고 지금 선생이...

남(김인호) : 지금 핵문제는 그 정도로 그만 좀 이야기하시고... 우리 위원장에게 발언권 얻어서 제가 조금...

북(김정우) : 가만있어. 위원장이 이야기하면 내가 발언할 권한이 있어. 셋째는 뭐라고 썼는가? 『핵문제의 해결이 없는 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전제조건을 달았오, 안달았오? 『핵문제의 해결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지 않았습니까? 전제조건을 달고서는 또 왜 설명할 때는 핵문제도 해결하고 이것도 해결하자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면 여기다 『핵문제도 해결하고 남북관계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자.』이렇게 써 줘야지, 왜 전제조건을 달았는가? 왜 미국사람이 말하는 그대로 달고 내려가면서 말하고...

남(임동원) : 미국사람들이 말하는 그대로... 그런 말은 조심하세요.

북(김정우) : 자, 미국사람들이 말한 자료를 인용해 줄까요? 손위원동무가 좀...

남(김인호) : 가만, 가만, 우리 위원장이 나에게 발언권 준 것은 막아놓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무슨 이런 방법이 있어요?

북(손종철) : 자, 여기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 레오나르도 스펙터의 『미국은 지금까지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보도기관에 넘긴 적이 있다. 북조선에 대해서도 남북상호핵사찰을 받아들이기 위해 핵연료를 축적하고 있다는 의혹을 고

의적으로 퍼뜨렸다.』

그리고 그쪽입니다. 『한민족연구』 1992년 1월 6일 호에 『...미국이 핵사찰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을 핵보유국처럼 위험한 존재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현재 38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핵재처리시설이 완료단계에 있는 일본의 경우를 모르는 체하고, 북의 경우를 의도적으로 과장하며 선전해온 그 저의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목적은 주한미군 감군을 무기한 연기하자는 것, 그 다음 달아오르는 한국민의 반미감정을 희석시키는 한편, 민족갈등을 조성시켜서 미국 지배세력의 간섭을 더욱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객관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문에도...

남(임동원) : 손선생, 됐어요. 나도 그 기사를 읽어 봤어요. 그것이 객관적인 보도인지, 주관적인 보도인지... 객관적인 견해인지, 주관적인 견해인지...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하세요.

남(김인호) : 그런 논의도 가능한 것이 남쪽 사회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북(손종철) :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으로써 론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경험이 그걸 실증해 주고 있어요.

남(임동원) : 그 정도로 하시고 을사조약의 법적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우리 김위원이 이야기합시다.

남(김인호) : 아까 일본조약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할말이 없어서가 아니고, 오늘 우리 분과위의 고유목적하고 상당히 동 떨어진 논의에 너무 많은 시간을 이미 김위원장이 보냈는데, 우리가 거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아서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그러나 꼭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약이 무효다 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조약이든 법률이든 계약이든간에 절차상이나 내용상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조약이 무효다 할 때는 당연히 그 조약의 형성과정에 있었던 절차상의 하자를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설명이 다 되는데, 덧붙여 이야기하면 『체결이 된 것이 아니다...』, 『체결』에 말꼬리를 잡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체결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체결되어 있다 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이 합법적으로 체결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만약에 그걸 인정하면 논리에 모순이 생겨요. 왜? 무효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보고 체결을 역사적으로 인정했다 함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일관계는 남이 됐건 북이 됐건 과거를 소급하여 재정리하고, 또 앞으로 미래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생각이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측도 일본과 수교 협상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새로운 미래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협상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한일관계

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복측에서 제기한 문제도 우리가 해결하고, 더욱 명백히하고 넘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의 연구결과로 나온 것이 그것으로 전부입니까?

우리 위원장께서 적절히 지적하셨듯이 그런 것도 있고, 똑같은 상황도 앞으로 우리가 발굴여하에 따라 지금까지 발굴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미처 생각치 못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지금까지 돼 있는 일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정부당국에서 이것을 안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정부당국이 이것을 문제화하여 해결해야 될 상황이라면,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양쪽간에 서로 해결해야 될 기반이 뭐냐? 앞으로 사회문화분야의 공동위가 설치된다면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토의할 기반이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교류·협력분과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합니까? 물론 그쪽에서는 적절하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우리의 입장은 교류·협력분과위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논의하는 장소로는 결코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류·협력을 비롯한 각 분과위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동위 등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문제

들을 깊이 논의하기 위한 기본틀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임무가 지금 무수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합의서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지난번 회의결과를 감안해서 새로운 합의서 초안을 5차로 제시했는데, 이번에 귀측에서는 합의서 내용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좁힐 만한 것은 하나도 가져 오지 않고 지금 이야기한 그러한 문제들만을 가지고 왔는데, 내가 볼 때 귀측이 그러한 문제들에 의미를 둔다는 것을 나무랄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임무에 비해서 그것은 분명히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북(정덕기) : 시간이 없으니 간단 간단히 말합시다. 김인호선생은 서울법대를 졸업하지 않았어요?

남(김인호) : 맞습니다.

북(정덕기) : 맞으면 법을 전공한 사람이 문장해석은 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쪽에서 쓴 문장을 보시오.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왜 『체결된』이라고 해 가지고...

남(김인호) : 그러니까 말장난을 지금 귀측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북(일 동) : 무슨 말장난이야, 동무! 무슨 말장난이야? 민족의 존엄을 찾는 일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민족의 존엄을 찾는 문젠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다고 말장난이라고 해? 같은 동족간에 민족의 존엄을 찾는 문제인데... 지금 외국사람이 와서 말하는 감을 받

아요. 이것이 같은 동족인가...

남(김인호) : 그러면 체결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으면 어떻게 무효가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전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무효가 되느냐 말이야.

북(김정우) : 지금 김선생이 뭘 모르는가? 체결된 것인지 체결 안된 것인지도 모른다고... 이 조약은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남(신현웅) : 그런데 지금 일방이 일방을 사대주의다, 비애국적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것은 기본자세나, 기본예의나, 용어선택의 근본적인 문제라구... 이런 식으로 하면 회담이 바람직스럽게 진행되기가 아주 힘들어요.

북(김정우) : 65년도에 조약을 체결하면서 잘못된 것은 책임을 져야지...

남(임동원) : 이봐요, 조금 조용히 하세요. 앞으로 부속합의서 계속 논의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북(김정우) : 하자는 거지요.

남(임동원) : 합시다. 그럼 다음 날짜를 잡고...

북(김정우) : 하는데 거기서 전제조건을 철회하는가, 안하는가? 그것을 명백히 하라요. 전제조건을 철회하는가, 안하는가?

남(임동원) : 그리고 교류·협력분과위원회가 부여받은 일을 성실하게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확실히 해요. 왜 다른 문제를 끌고 들어와 가지고 지연전술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북(손종철) : 어느 게 다른 거예요?

남(임동원) : 이 문제는 이 큰 부속합의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북(김정우) : 아니 임선생, 임선생은 지금 회담 안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며 그 위에 총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오? 총리사이에 편지로 제기한 문제인데, 협력·교류분과위원회에 위임했다고... 위임했으면 토론을 해야지.

남(임동원) : 위임을 안받았다 이거야. 위임을 하지 않겠다고 회신하지 않았는가 말이야.

북(김정우) : 어디다 위임 안하겠다고 그랬어요?

남(임동원) : 어디에 위임을 했어요? 필요없다고 얘기했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북(정덕기) : 핵사찰을 전제로 해서 교류를 류보하겠느냐, 안하겠느냐는 데에 관한 귀측의 입장을 밝히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남(임동원) : 어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디?

남(김인호) : 그 정도로 설명을 했으면 알아 들어야지.

남(임동원) : 자 김선생, 이제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결론을 내도록 합시다. 다음 회의 날짜를 정하고 부속합의서 문제를 성실하게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북(김정우) : 다음 날짜를 정하기 전에 그쪽 총리가 우리 총리에게 보낸 편지를 임선생 봤오?

남(임동원) : 그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북(김정우) : 봤으면 왜 위임 안됐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쪽 총리는 명백히 여기다 말했는데...

남(임동원) : 귀측이 위임하자고 그랬잖아요?

북(김정우) : 예.

남(임동원) : 우리 총리는 그것을 위임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북(김정우) :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지 말고 거기다 위임을 안한다고 쓴 것이 어느 문장에 있습니까? 어느 문장에 위임 안한다고 썼어요? 부속합의서를 내오고 사회문화협력·교류공동위원회를 하자 했으면, 사회문화협력·교류공동위원회가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위임된 거지, 어떻게 돼서 위임이 안된 건가?

남(임동원) :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신현웅) : 일에는 순서가 있으니깐, 순서를 따라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북(김정우) : 아 뭐 길게 이야기할 것 없어요. 총리 편지에 명백하게 사회문화협력·교류공동위원회가 나온 다음에 하자고 그랬기 때문에 나는 위임된 거로 보고 오늘 제기를 했고, 나는 우리 총리로부터 위임받았고... 그런데 그쪽에서 위임 안받았다니까 편지 내용을 똑똑히 보란 말이오.

남(신현웅) : 그러니까 먼저 부속합의서가 채택이 되고, 사회문화공동위원회가 빨리 운영되게 해서 활동시키고, 그래서 공동연구가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당국간에 협의하고 어떤 대책을 해야지, 이게 순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거꾸로 되면 되겠어요? 안되지.

북(정덕기) : 그래서 긴급의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긴급의제! 언제 공동위원회 때까지 기다려요.

남(신현웅) : 민족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어요.

북(김정우) : 귀측의 보도기관이 원문까지 다 사진에 냈는데…

남(신현웅) : 우리가 그런 과거의 부끄러운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교류·협력을 해서 하자는 이런 겁니다.

북(김정우) : 그쪽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할 차례니까 좀 조용히해요. 거기
위임 안한다는 말이 있으, 없오? 간단히 대답해 보시오.

남(임동원) : 자, 보세요. 우리 정총리께서 연총리께 보낸 편지에 이런 구
절이 있어요. 『귀하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민족 어느 누구도 일제가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체결한 을사조약을 비롯한 제반
조약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바 없습니다. 우리측은 을사조약, 정
미7조약 등 구한말에 맺은 모든 조약이 처음부터 무효라는 입장이며,
이와 같은 입장은 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을 통해 일본측에 명백히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북(김정우) : 아, 위임 안한다는 조항만 읽구려. 다 읽을 필요없어요.

남(임동원) :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오늘 내 첫발언을 통해서 우리 정총
리께서 위임한 데 따라서 공동결의문같은 것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대
처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필요하지 않은데, 다만 여기에 써있는 것은
… 잘못 오해하지는 말아요. 다만 『남과 북이 공동의 역사였던 과거에
어두웠던 일들을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준수 차원에서 함께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일체감을 조성하는 첫걸
음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견지에서 을사조약, 정미7조약의 날조

사실 규명과 아울러 항일의병 및 독립운동 등 우리의 근대사와 관련한 새로운 사료를 발굴·교환하고, 이를 공동조사·연구하기 위해 남북역사학자간에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우리 쌍방 당국은 앞으로 발족될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남북학술교류차원에서 그러한 일을 주선·지원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 작성을 더욱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북(김정우) : 그래요. 그게 위임한 것이지, 어디 안한다고 했어?

남(김인호) : 아니, 그것이 어떻게 위임한 걸로 됩니까?

남(임동원) : 학술조사·연구를 위한 노력이에요.

남(김인호) : 김위원장, 그걸 어떻게 위임했다고 해석을 합니까? 그것은 따라서 사회문화공동위원회가 되어야만 검토되니까...

북(김정우) : 김선생은 계약조문도 똑똑히 해석할 줄 모르면서 조용히 하라우.

남(김인호) : 똑똑히 이야기하라고... 말조심하십시오.

북(김정우) : 아니 인호선생, 인호선생...

남(김인호) : 인호선생이라니... 북측에선 어떻게 부르는가 몰라도 우리는 개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실례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북(김정우) : 그쪽에서는 뭐라 했는가? 부속합의서를 8차 회담 전에... 그건 오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8차 회담 전에 나와야 된다...

남(임동원) : 물론이죠.

북(김정우) : 그러니까 그것을 정정보도 하는 걸 전제로 하고 다음 회담

을 약속합니다. 신문에다 났고 방송에도 났으니까...

남(김인호) : 아니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를 상식으로 인정을 안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북(김정우) : 부속합의서를 8차 회담 전에 해야 된다는 것을 정정보도하십시오.

남(김인호) : 빨리 합의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 총리의 편지 아닙니까?

남(임동원) : 김위원장, 다음은 귀측에서 이야기할 차례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날짜를 제의해 보세요. 그리고 빨리 회의를 종결하십시오.

북(김정우) : 그러면 정정보도를 전제로 하고 날짜를 약속합니다. 7월 31일 합니다. 금요일일 겁니다. 그쪽에서 토요일, 일요일은 자꾸 싫다고 해서...

남(임동원) : 아니, 그래 가지고 언제 9월 5일 전에 부속합의서를 다 완성할 수 있겠어요?

북(김정우) : 그건 문제가 없어요. 다음번엔 그쪽에서 명백히 자기 입장만 표시하면...

남(임동원) : 아, 우리 입장은 명백히 다 표시되어 있어요.

북(김정우) : 그리고 합의하자고 하게 되면, 며칠에 한번씩 연속으로 해서라도 아직도 9월 5일까지 날짜는 많습시다. 7월 31일에 합니다. 그런데 부속합의서를 8차 회담 전에 할 수 없다고 말한 이동북대변인의 말은 수정보도해 가지고 나오시오.

남(임동원) : 7월 31일... 너무 늦지 않아요?

북(김정우) : 그러면 언제 하자는 거요?

남(임동원) : 우리는 지금 내용문제에 있어 한 네가지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 문안정리하는데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거기서 뭐 우리측 안대로 그대로 다 받겠다면 문안정리는 한두번 하면 되겠지요. 난 그렇게 이해하고 ...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겠어요?

북(김정우) : 임위원장은 욕심이 많구만.

남(임동원) : 그렇지 않고 서로 절충을 해야 될 것이 있다든가 한다면 그렇게 한두번 가지고 안됩니다. 요전에 뭐 워낙 유능한 분들이 실무접촉을 하였지만서도, 역시 김위원장이 뒤에서 질질 끌려고 그러는지 잘 안되었으니까(웃음)...

북(김정우) : 난 자꾸 다구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자꾸 부당한 것을 내놔서 그래요.

남(임동원) : 31일보다도 한주 전인 7월 20일이 월요일인데, 그 주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북(김정우) : 7월 31일이 그쪽에서 정 불편하면 28일에 합시다.

남(임동원) : 28일은 화요일입니다. 겨우 이틀 그저...

남(김인호) : 한주일 당기면 어때요? 한주일...

남(임동원) : 한 일주일 정도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북(김정우) : 그쪽에선 하지 않겠다고 전제는 자꾸 걸면서 날짜는 앞당기는데(웃음)...

남(김인호) : 이거 보세요.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수정안을

내 가지고 와요? 수정안을 들고 와야지... 그런 태도가 어디 있어요?

북(김정우) : 김인호선생은 외부 다른 나라 가서 회의도 참가 안해 봤나

...

남(김인호) : 꼼꼼히 양측 위원장 발언문을 놓고 반성을 해 보시라구요.

북(김정우) : 임위원장, 그쪽 위원들 회의례의나 잘 가르쳐 가지고 데리고

나오라요. 그쪽 위원장이 말해도 옆에서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겠어.

남(임동원) : 나는 정말 오늘 얘기하고 싶은 말 미리 했기 때문에... 지금

김위원장 제시한 날짜보다 한주일 앞당겨서, 같은 금요일이 되겠는데,

7월 24일 하면 어때요?

북(김정우) : 28일날 합시다.

남(임동원) : 그래서 원만하게 빨리 문안정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지. 물론 나는 김위원장을 신임하고 싶은데, 귀측에서 우리측 안건을

그대로 받을 걸 전제로 쉽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뭐 그때 가서 또 마

음이 변할까 봐 내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북(김정우) : 그쪽 안은 받아들이지 못할 안이 가득합니다.

남(임동원) : 그렇다면 한두번 가지고 되겠느냐 말예요. 그러니까...

북(김정우) : 그러니까 우리 안을 잘 연구해 가지고 시원스레 나오시오.

7월 28일로 정하고 그만합시다. 자꾸 더 토론할 것 없이...

남(임동원) : 28일? 24일로 해요, 24일...

북(김정우) : 24일 할 수 없어요. 28일로 합시다.

남(임동원) : 왜 그렇게 자꾸 늦추려고 하는 겁니까? 그 의도가 뭐예요?

북(김정우) : 그건 의도가 아니라 그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준비를 많

이 해서...

남(임동원) : 아니, 연구를 지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제 할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그냥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오늘 김위원장 수정안을 가지고 만나오는 성의 없는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북(김정우) : 수정안을 가지고 나올 형편이 못됐지요.

남(임동원) : 수정안이 아직 덜 됐구만.

북(손종철) : 다 순차가 있는데 우리도 다 있어요.

북(김정우) : 그쪽에 돌아가서 실언하는 사람들에게 다 주의 주시오. 찬물을 끼얹지 말고 그 다음에 말을 주의하라고...

남(임동원) : 28일, 다른 것하고 겹치는 것은 없나? 좋습니다. 7월 28일 김위원장 하자는 대로 합시다. 그 대신에 한두번 위원접촉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측 안을 대부분 받는 것으로 낙관적으로 기대를 해 볼 거예요. 잘 연구를 해 가지고...

북(김정우) : 그건 검토를 합시다. 그리고 남측 기자선생들 자꾸 오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오보가 안되게 잘 좀 보도를 하시오.

북(손종철) : 그럼, 공개를 했으니까 잘 보도를 해야지.

남(임동원) : 자, 끝냅시다. 수고했어요.

<雙方 委員 人事 交換 後 退場>

